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② 국제관습법의 효력이 조약에 우선한다.

③ 판례와 학설은 국제법규의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개국 사이의 지역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⑤ 법의 일반원칙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의 원칙 등이 있다.

문 2.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 또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② 대통령이 비준하여 공포·시행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③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

문 3. 교전단체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란단체가 일정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배제하고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이 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될 수 있다.

②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반란단체 행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중앙정부는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 없다.

④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제3국은 중립의 지위에 놓인다.

⑤ 교전단체로 승인받은 반란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문 4. 국가의 형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방국가는 대등적 국가결합이나, 국가연합은 그렇지 않다.

② 피보호국(protected state)이 되어도 국제법상 국가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1년 남북합의서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④ 교황청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⑤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문 5.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ㄴ. 2001년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는 기존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을 수정하여 국제위법행위 개념에 국제범죄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ㄷ. 사인의 행위라도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ㄹ. 행정부가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므로 행정부의 행위만이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ㅁ. 국가기관의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성격을 지녔더라도 이로부터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6.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상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는 책임을 진다.

③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타국의 통제(at the disposal) 하에 놓인 기관이 타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기관의 소속국 행위로 간주된다.

⑤ 한 국가가 타국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문 7. 영토취득에서 실효적 지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의 경우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

② 지배의 실효성 정도는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판례로 팔마스섬(Palmas Island)사건이 있다.

④ 실효적 지배란 일시적으로나마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의 경우에도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

문 8. 국제연맹과 국제연합(UN)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연맹이 다수결제를 표결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UN은 만장일치제를 취하고 있다.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제연맹의 주요기관이 아닌 반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주요기관 중 하나이다.

③ 탈퇴에 관해 국제연맹이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UN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제연맹이 연맹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한 반면, UN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을 결정하고 있다.

⑤ 국제연맹은 조약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UN은 조약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다.

문 9.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
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ㄷ. 안전보장이사회는 법률적 분쟁을 직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ㄹ.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협정의 체결 없이도 회원국들에게 병력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ㅁ.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10. 국제연합(UN) 총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회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그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
ㄴ.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ㄷ.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권고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ㄹ. 총회는 UN헌장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과 관련하여 토의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1.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외국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를 외교적 보호라고 한다.
② 피해자인 자국민이 원하는 경우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이다.
③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침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⑤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는 외교적 보호와 관련한 초안 작업에서 무국적자를 위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1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의 영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암석이라도 자신의 영해를 갖는다.
② 군도국가의 경우 내수 바깥에 소재하는 군도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영해가 아니다.
③ 영해의 경계획정은 당사국간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④ 잠수항행은 영해의 무해통항에 포함된다.
⑤ 역사적 만(historic bays)은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지 않아도 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②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의 경우,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동의가 있어야 의무가 부과된다.
③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3국의 동의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여된 조약상 제3국의 권리는, 제3국의 동의 없이 취소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당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없다.
⑤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과된 조약상 제3국의 의무는, 당사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 없이 당사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문 14. <제시문>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라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A국과 B국의 양국간 분쟁이 ICJ에 회부될 때 ICJ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제시문>
A국과 B국은 모두 국제연합(UN) 회원국이다. A국은 1946년 8월 14일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1946년 8월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관할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B국은 1948년 7월 6일 "다자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는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 조항에 규정된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관할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들은 모두 그 선언일자에 발효하였다. 1957년 10월 2일 B국이 A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하였다.

① 양국 간의 양자조약 해석에 관한 1948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② 양국 간의 지역관습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1950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③ UN헌장 해석에 관한 1952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④ A국이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한 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1954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⑤ 국제관습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1956년 8월 4일 발생한 양국간 분쟁

문 15. 「국제연합(UN)헌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UN의 목적과 원칙을 밝힌 헌장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ㄴ. 분쟁당사국은 헌장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과 사법적 해결의 수단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ㄷ.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헌장의 최고원칙이므로, 헌장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6.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화유지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② 평화유지군은 무력충돌 시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는 무력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하므로 분쟁당사국이 UN 회원국이면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고 그 활동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진다.
④ 1956년 수에즈 운하 분쟁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설치된 유엔긴급군(UNEF)은 평화유지군에 해당한다.
⑤ UN의 평화유지활동은 평화유지와 함께 선거감시 등 평화의 구축을 위한 임무로 확대되고 있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ㄴ.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ㄷ. 재판소의 재판은 단심으로 종결되나, 판결의 선고 당시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이 허용된다.
ㄹ.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존중된다.
ㅁ. 재판소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이란 재판관 중에 해당 소송사건의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을 경우에 임시로 선임되는 재판관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ㄷ, ㅁ

문 18.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상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군함은 연안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연안국에 통고함으로써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②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③ 상선과 마찬가지로 민간 항공기도 영해 상공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④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하여 영해 내에서 항행 중인 군함을 나포할 수 있다.
⑤ 핵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질 수 없다.

문 19. 국제법상 강행규범(절대규범, peremptory norm)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②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③ 국가행위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 그 조약의 시행을 통해 생긴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태는 그 유지 자체가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회원국은 WTO의 직원과 WTO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 기능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GATT 1947은 GATT 1994의 구성부분 중 하나이다.
③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④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총의(consensus), 다수결, 역총의(reverse consensus) 등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WTO는 GATT 체제에서 유지되어 온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의 관행을 명문화하였다.
③ WTO에서는 명문으로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총의가 의사결정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④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설치,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은 역총의에 따라 결정된다.
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의 3/4 다수결로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비차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상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에만 관련이 있고, 수출에는 관련이 없다.
②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승인된 보복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원칙은 양허가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④ WTO설립협정에 따라 승인된 의무면제(waiver)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⑤ 내국민대우원칙은 재정조치뿐만 아니라 비재정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문 2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분쟁해결제도상 선례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된다.
③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일견 WTO 회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분쟁해결양해(DSU)상 분쟁해결절차와 다자간 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가 상충하는 경우 DSU상 분쟁해결절차가 우선한다.
⑤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나 결정으로 대상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축소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상 패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방당사국의 요청만으로도 패널이 설치된다.
② 제소국은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라도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는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패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중개,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회원국이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단일패널의 설치가 가능하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보상 및 양허의 정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③ 보상 및 양허의 정지를 승인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분쟁해결기구(DSB)에 있으며 이 승인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로 이루어진다.
④ 양허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⑤ 양허의 정지 수준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DSU)에 규정된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노 동 법

문 1. 우리나라 노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종속노동에 관한 법적 관계를 규율한다.
③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④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⑤ 사유재산제 등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단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단결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ㄴ. 단결권에는 집단적 단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ㄷ.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ㄹ. 단결권은 근로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
ㅁ. 단결권에는 단결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문 3. 근로자 및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
③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동일하다.
④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된다.
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문 4.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1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ㄷ.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ㄴ, ㄷ, ㄹ

문 5.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제23조 제1항)
② 휴업수당(제46조)
③ 주휴일(제55조)
④ 연차 유급휴가(제60조)
⑤ 생리휴가(제73조)

문 6.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연장근로의 합의
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ㄷ.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의 30일 전 예고
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통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ㄷ.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ㄹ.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9. 근로자 甲은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2005년 1월 1일에 입사해 2015년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다. 근로자 甲이 2014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2015년에 甲에게 주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① 15일 ② 18일 ③ 19일
④ 20일 ⑤ 25일

문 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양수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른다.
②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③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⑤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문 1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④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와의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다면, 적법한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12.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문 13.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 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다.

②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규범적 부분이다.

③ 회사의 승낙에 의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4.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의 피케팅은 정당화될 수 없다.
ㄷ.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15.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도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④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문 16.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해당 지부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ㄹ. 법인등기를 하여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7.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⑤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문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한다.

④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고충처리위원을 선출한다.

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문 19.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및 지역적 구속력(제36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위원회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다.

④ 일반적 구속력은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자 간 부당경쟁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⑤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문 21.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司法)적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직접 노사 간의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킨다.
ㄷ.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私法)상 그 효력이 없다.
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ㅁ.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를 행한다.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7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문 23.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③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문 24.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없고 조정사건만을 담당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었던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④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말한다.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ㄹ. 협약은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협약은 매매계약의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협약은 당사자의 행위능력의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협약은 물품에 관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④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⑤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텔렉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매에 의한 매매　ㄴ.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
ㄷ. 주식의 매매　ㄹ. 선박의 매매

① ㄱ　②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청약이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면,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회수될 수 없다.
② 승낙기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③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을 상실한다.
④ 승낙기간 중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⑤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인도의 장소와 시기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기간의 기산에 대한 규정이다. (ㄱ), (ㄴ), (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ㄱ)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ㄴ)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ㄷ)으로부터 기산한다.

	(ㄱ)	(ㄴ)	(ㄷ)
①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봉투에 표시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②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우편함에 투입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시점
③	전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봉투에 표시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시점
④	전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봉투에 표시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⑤	상대방이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사실을 인식한 시점	우편함에 투입한 일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시점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매수인은 협약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없음)

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매도인이 견본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는 경우
⑤ 매도인이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매도인은 (ㄱ)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ㄴ)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ㄱ)	(ㄴ)
①	법정지법	손해배상
②	계약	손해배상
③	법정지법	원상회복
④	계약	원상회복
⑤	법정지법	부당이득반환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의 부적합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A), (B), (C),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A)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B)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C)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 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D)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A)	(B)	(C)	(D)
①	대체물의 인도	본질적 계약위반	물품부적합	수리
②	수리	본질적 계약위반	수리청구	대체물의 인도
③	수리	계약위반	수리청구	대체물의 인도
④	수리	계약위반	물품부적합	대체물의 인도
⑤	대체물의 인도	계약위반	수리청구	수리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③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④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⑤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면책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ㄴ. 당사자의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서 협약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 상대방은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한 경우, 당사자는 그 제3자의 불이행이 협약상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면책된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ㄴ. 물품검사 ㄷ. 대금지급장소
> ㄹ. 이자 ㅁ. 손해배상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문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행사가능한 권리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의무이행청구권 ② 계약해제권
③ 대금감액청구권 ④ 손해배상청구권
⑤ 부가기간지정권

문 14.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 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법보다 해당 법률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 ㄷ.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권리능력은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한다.
> ㄹ.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5. 국제사법상 반정(反定)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은 유언의 변경에 관하여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국제사법은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행위지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국제사법은 물권 및 법정채권 분야에 대해서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한다.

⑤ 국제사법은 부양의 의무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 16.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만 19세에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甲과 출생시부터 미국과 독일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현재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乙이 일본에 있는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행위능력의 유무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문제되었다. 이 경우 어느 법에 의해 甲과 乙의 행위능력의 유무를 정하여야 하는가? (다만, 준거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甲의 행위능력	乙의 행위능력
①	대한민국법	미국법
②	일본법	일본법
③	대한민국법	대한민국법
④	미국법	독일법
⑤	미국법	미국법

문 17. 중국 사람인 甲은 자기의 소유인 미국 소재 주택의 매매를 위해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을 대리하여 자신의 영업소에서 프랑스 사람인 丙과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乙의 행위로 인하여 甲이 丙에게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법에 의하는가? (다만, 甲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준거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미국법
④ 프랑스법 ⑤ 중국법

문 18.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이 그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도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국의 법이 그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근로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근로자가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다.

문 19. 국제사법상 환어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어음의 인수인의 채무는 서명지법에 의한다.
ㄴ. 환어음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고, 서명지법에 의하여 그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의 행위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ㄹ. 환어음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ㅁ.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행지법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0. 국제사법상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A)법에 의한다.
ㄴ.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B)법에 의한다.
ㄷ.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C)법에 의한다.

	(A)	(B)	(C)
①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지	국적소속국
②	목적물의 소재지	출발지	국적소속국
③	국적소속국	출발지	운행허가국
④	운행허가국	목적지	국적소속국
⑤	운행허가국	목적지	운행허가국

문 21. 영국인 甲은 2008년 친구인 독일인 乙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소유의 별장을 준다는 유언을 하였다. 그 후 甲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상거소를 두고 있던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2011년 甲은 위의 유언을 철회하였고, 그 별장을 동거녀인 일본인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후, 여행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은 여전히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유언의 철회의 준거법은? (다만, 준거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미국법 ② 독일법 ③ 영국법
④ 일본법 ⑤ 이탈리아법

문 22.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중국인 甲은 일본여행 중 쇼핑몰을 구경하다 실수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독일인 乙이 운영하는 가게의 고가품을 파손하였다. 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다만,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고, 준거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반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국법 ② 일본법 ③ 독일법
④ 대한민국법 ⑤ 중국법과 독일법

문 23. 국제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달리 선택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에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다시 대한민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문 24. 국제사법상 혼인의 준거법에 대한 사례이다.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중국인 甲男과 캐나다인 乙女는 모두 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려고 할 경우,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ㄱ)에 의하고, 혼인의 방식은 (ㄴ)에 의한다.

	(ㄱ)	(ㄴ)
①	대한민국법	중국법
②	중국법	캐나다법
③	캐나다법	미국법
④	미국법	미국법
⑤	미국법	대한민국법

문 25. 국제사법상 해상에 관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피해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
③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 충돌지법이 적용된다.
④ 선박사용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
⑤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적국법이 적용된다.

형 사 정 책

문 1.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상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②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소장이 결정한다.
③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3인 이하로 한다.
④ 수용자에 대한 징벌로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과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
⑤ 소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문 2.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퀴니(Quinney)는 피지배집단(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적응(accommodation)범죄와 대항(resistance)범죄로 구분하였다.
> ㄴ. 볼드(Vold)는 법제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았다.
> ㄷ. 터크(Turk)는 피지배집단의 저항력이 약할수록 법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 ㄹ. 봉거(Bonger)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보고, 근본적 범죄대책은 사회주의 사회의 달성이라고 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ㄴ.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 ㄷ. 독거수용실에만 텔레비전 시청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 중인 수용자가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독거수용실 수용자를 혼거실 수용자와 차별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4.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ㄴ.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수형자에게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ㄹ. 수형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2일간은 작업을 면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5. 리스트(Liszt)의 형사정책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벌의 목적으로 특별예방사상을 처음으로 주장함으로써 형벌 예고를 통해 일반인의 범죄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형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았다.
②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③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무해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부정기형의 폐지, 단기자유형의 활용, 강제노역의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⑤ 형벌의 주된 목적을 응보로 이해하였다.

문 6. 암수범죄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점절도를 숨긴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리벽을 통해 관찰하는 등의 참여적 관찰 방법은 인위적 관찰 방법에 속한다.
② 중범죄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범죄를 조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자의 자기보고 방식이다.
③ 피해자를 개인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암수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④ 자기보고, 피해자 조사 등은 암수범죄의 직접 관찰 방법이다.
⑤ 정보제공자 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문 7. 벤담(Bentham)의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 형벌대용물사상을 주장하였다.
③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 형태를 구상하였다.
④ 범죄자에 대한 적개심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채찍질처럼, 감정에 따라 불공정하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⑤ 범죄를 상상(관념)적 범죄와 실제적 범죄로 구별하려고 하였다.

문 8.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문 9. 현행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④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5년, 단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 10. 현행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④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문 11. 현행 「소년법」상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강명령 ② 단기 소년원 송치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④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

문 12. 현행 「소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건을 송치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④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 소년부 판사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문 13.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과 그에 해당하는 이론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범죄는 하나의 단일문화가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의 행위규범을 따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다.
ㄴ.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기관들이 주민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공통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ㄷ. 인간은 범죄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a. 사회해체이론	b. 통제이론	c. 문화갈등이론

① ㄱ-a, ㄴ-b, ㄷ-c ② ㄱ-b, ㄴ-a, ㄷ-c
③ ㄱ-b, ㄴ-c, ㄷ-a ④ ㄱ-c, ㄴ-a, ㄷ-b
⑤ ㄱ-c, ㄴ-b, ㄷ-a

문 14. (ㄱ)~(ㄷ)에 들어갈 학자를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은(는)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별하고 자연범은 연민과 성실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ㄴ)은(는)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한다."라는 말로써 사회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ㄷ)은(는)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범죄정상설을 주장하였다.

	(ㄱ)	(ㄴ)	(ㄷ)
①	가로팔로(Garofalo)	라까사뉴(Lacassagne)	뒤르껭(Durkheim)
②	가로팔로(Garofalo)	라까사뉴(Lacassagne)	리스트(Liszt)
③	롬브로조(Lombroso)	타르드(Tarde)	뒤르껭(Durkheim)
④	페리(Ferri)	께뜰레(Quetelet)	리스트(Liszt)
⑤	페리(Ferri)	타르드(Tarde)	께뜰레(Quetelet)

문 15.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는 귀속과 낙인의 산물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의 속성이라고 본다.

② 범죄행위 자체보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반작용에 관심을 둔다.

③ 랑에(Lange)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베커(Becker)는 직업, 수입,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낙인은 주지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⑤ 국가가 범죄자의 적발과 교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범죄대책으로 제시한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이드(Freud)는 의식을 에고(Ego)라고 하고, 무의식을 이드(Id)와 슈퍼에고(Superego)로 나누었다.

② 정신분석학은 개인이 콤플렉스에 기한 잠재적인 죄책감과 망상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에이크혼(Aichhorn)에 따르면 비행소년은 슈퍼에고(Superego)의 과잉발달로 이드(Id)가 통제되지 않아 양심의 가책 없이 비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④ 슈나이더(Schneider)는 정신병질유형 중에서 과장성(자기현시성) 정신병질자는 고등사기범이 되기 쉽다고 보았다.

⑤ 정신분석학은 초기 아동기의 경험과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17.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8. 다음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레크리스(Reckless)는 압력(pressures), 유인(pulls), 배출(pushes) 요인이 범행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② 허쉬(Hirschi)는 개인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믿음(belief), 참여(involvement)를 제시하였다.

③ 맛짜(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범죄자가 피해자 혹은 사회일반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더 높은 가치에 의지하는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중화(Neutralization)기술'이라고 하였다.

④ 머튼(Merton)은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에 반응하는 방식 중 '혁신형'은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 수단을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이론'은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문 19. 범죄생물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이콥스(Jakobs)는 남성성이 과잉인 XYY형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강한 범죄성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② 아이센크(Eysenck)는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대뇌에 가해지는 자극이 낮기 때문에 충동적, 낙관적, 사교적, 공격적이 된다고 보았다.

③ 달가드(Dalgard)와 크린글렌(Kringlen)은 쌍둥이연구를 통해 범죄 발생에서 유전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④ 꼬르떼(Cortés)는 신체적으로 중배엽형의 사람일수록 범죄성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⑤ 폴링(Pauling)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지각장애와 영양부족·저혈당증에 수반되는 과활동반응에서 범죄원인을 찾았다.

문 20. 단기자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정도 기간까지의 자유형이 단기자유형인지를 현행 「형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단기자유형을 받는 수형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시설 내의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단기자유형의 예로 현행 「형법」의 구류형이 언급된다.

④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벌금형의 활용,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등이 거론된다.

⑤ 현행법은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구금, 휴일구금, 충격구금(shock probation)을 도입하고 있다.

문 21.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자유형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일부인 6개월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1년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문 22. 현행 「형법」상 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②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무기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석방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

문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배 가중해야 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금고와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면 누범가중할 수 없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더라도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는 없다.

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감경 사유와 누범가중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누범가중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미결수용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지만, 수형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구치소에 수용할 수 없다.

④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2분의 1의 기간이 지나야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25.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②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